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 미결론… 조희대 국정조사는 강행

(대법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디지털법과 같이 시행 의견이나
과세시작 60일 남아 빠르게 결정”
내달 5일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의혹 철저규명, 의구심 해소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당 내 의견을 더 수렴하고 이른 시일 안에 입장을 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디지털기본자산법이 제정이 된 후 같이 시행돼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나왔고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해서 정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과세 시작까지) 60일 정도 남았다. 빠른 시일 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내부에선 기본법 체계를 먼저 갖추고 과세를 시행해야 하고, 실제 거래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7일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데이터를 확보해 과세 체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증하는 작업을 먼저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민주당TV의 코너 ‘민티07’에 출연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우리가 제대로 준비돼 있는지 정확히 짚어봐야 하지 않겠냐”며 “일의 선후가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고,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화된 이후에 시스템이 작동되는 걸 본 시점에서 과세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를 과세했을 때 세무 행정상 무리 없이 가동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냐고 짚어봤는데, 가상자산이 신종 유형이 발생하고 예측불가능할 정도로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경우를 상정해서 사전 준비 시스템을 갖춰야 하지

않겠냐”라며 “(지금은) 약간 부족하지 않냐는 지적이 있다. (과세를) 할 수는 있지만 더 완벽을 기해서 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정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를 오는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실시에 따른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없앴고 한병도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실시를 포함한 조 대법원장 관련 “사안은 지도부에 위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공개발언에서 “대법관 재제정 거부와 공백 장기화부터 현금 격려금과 업무추진비 집행까지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을 둘러싼 의혹도 겹겹이 쌓이고 있다”며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은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탄핵보다 더 비열하고 악질적”이라고 규탄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현안 관련 백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이 국정감사도 채 끝나기도 전에 의원총회를 열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11월5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를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노골적인 사법부 탄압이고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파기환송에 대한 유치한 보복이고, 대통령 부부와 최측근의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한 치졸한 겁박”이라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짓밟아서 대통령 본인의 재판에서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마음대로 고르기 위한 사전 포석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비악질적인 거대 여당의 국조 폭거에 맞서 싸울 것이다. 강력한 범국민적 저항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metro

“내년 소방예산 확대, 노후장비 바꿀 것”

장동혁 국회 대표-소방공무원 대화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강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과 관련해 “내년 예산부터 하나하나 따져서 (소방 재정에 대한) 국비 지원을 충분히 늘리고, 소방관들의 생명을 든든하게 지킬 수 있도록 노후 장비부터 확실하게 바꿔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전한 현장을 위한 소방공무원과의 대화’에서 “(소방공무원을) 국가적으로 전환해 놓고 국가가 (소방) 재정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소방 재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를 강조했다.

이어 “소방공무원이 국가적으로 전환된 지 벌써 6년이 됐다. 그런데도 여전히 소방 예산 가운데 국비는 10% 남짓에 불과하다”며 “중앙과 지방이 예산 핑퐁을 벌이는 동안 교체 시기를 넘긴 노후 장비가 40%에 육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소방재정과 관련해 언급한 ‘재정 빨대’ 표현에 대한 비판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전한 현장을 위한 소방공무원과의 대화에 참석해 안전한 현장을 위한 소방공무원 정책제안 자료를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소방 재정 관련해 ‘빨대’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면서 논란이 있다. 소방관을 위한 예산은 재정 낭비가 아니라 그 헌신에 보답하기 위한 국가의 최소한의 책무”라며 “소방관의 희생은 당연한 일이다. 그 희생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소방공무원 측은 처우 개선 과제로 ▲순직 소방공무원 별도 훈장 체계 신설 ▲

국가 재정 책임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소방 재정 확보 ▲국립묘지법 개정안 입법 추진 ▲순직 소방공무원·유가족 예우 강화 ▲국립소방병원 복합의료단지 시설 확충 등을 요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가 11월 3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안정적인 자원 확보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경수 기자 gws0325@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 비정상의 정상화”

이재명 대통령 “정치적 중립과 무관”

이재명 대통령(사진)은 야권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지속적으로 비판하는 데 대해 “이것도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또 수사·공소기관 수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은 정치적 중립과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입장도 다시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임명 후 두 번째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제4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수청장이 국무회의 참석하는 게 옳으니 그르니 논란이 많다”며 “이런 공개회의에 법적 의무로서 참석하는 일과 정치적 중립 사이에는 어떤 연관도 없다”고 밝혔다.

수사·공소기관 수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나오자 청와대 입장을 재차 명확히 밝힌 셈이다.



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부, 처, 청, 중앙행정기관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고, 또 대통령 지휘에 따라 국무총리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고 짚었다.

이어 “과거에 이런 국무회의에 참석 안 할 때는 사정기관들의 중립성이 잘 유지됐다. 그렇지 않다”면서 “오히려 이런 공간에서 국정의 기조, 방향, 가치, 지향 등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그것을 각자의 국가 업무, 본인들이 맡고 있는 국정에 반영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런 공개회의에서 안 하고 따로 내릴 지시를 하거나 안 할 수가 없지 않나. 지휘를 받는 기관인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냐”라며 “이런 공개회의에서 공유하는 게, 낫지 따로 하는 게 더 이상하다”고도 지적했다.

/서예진 기자 syj@

李 대통령, 오늘 민주당 중진과 靑 만찬

송영길·김태년·우원식 등 초청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8일 더불어민주당 5선 이상 중진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나 4선 이상 만찬 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권 통합 행보로 풀이된다.

27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8일 6선인 민주당 송영길 의원, 5선인 김태년·박지원·안규백·우원식·윤호중·이인영·정동영·정성호 의원과 만찬을 함께 한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정 현안에 대한 중진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당내 통합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하락세를 탄 당청 지지율에 대한 언급도 있을 전망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26일 5선 의원인 우원식 전 국회의장과 90분간 오찬을 가졌다. 오찬엔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이 배석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과 우 전 의장은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며 “이 대통령은 특히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우 의장은 이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이날 자리에선 ‘당내 갈등 때문에 국정 과제 추진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취지의 대화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일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함께한 4선 이상 만찬 자리에서도 통합을 강조하며 중진의원들의 역할을 당부했다.

/서예진 기자

“퇴직연금 전담관리, 독립적 주체 필요”

2026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감 안호영 의원, 고용장관에 질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퇴직한 이후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퇴직연금의 역할을 강조하며 국민연금공단처럼 이를 전담할 기구가 필요하다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노위)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담금이 제대로 납입되는지 확인하

고, 이직할 때 적립금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해야 하고 수익률도 높이는 등 여러 문제가 있는데, 전담으로 관리할 주체가 필요하다”며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이 있는데, 관리기구가 있다. 퇴직연금도 현재 약 500조원이고 앞으로 1000조원이 되는데,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수익성도 높이면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영훈 장관은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를 보장하는 중층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적 기관의 담당 부분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계속 있어서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듯하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퇴직연금이 개인 근로자가 금융사와 계약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무 적립이 안 되고 기금화가 되지 않아서 (적립금) 규모가 커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퇴직연금 10년 환산 수익률이 2.64%라고 한다. 관련해서 수수료를 보니까 2조1362억원이어서 상당히 높다”며 “퇴직연금의 규모가 커지는 만큼, 노후 소득 보장도 든든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라고 김영훈 장관에게 물었다.

김 장관은 “(수수료로) 금융사만 좋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